

균형발전

■ 차례 ■

1.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3.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4.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것
5. 균형발전 방향
6. 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될 것

1.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앞으로 제가 하는 5년 동안에는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지방경제는 위축되고 주로 수도권으로 돈과 권력, 인재들이 전부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과밀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한 비용지불이 많아져서 이대로 가면 수도권

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땅값이 비싸고 자연히 모든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지요.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이 되고 또 다른 분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발전전략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멀리 내다보면 국민통합, 국가통합의 꼭 피할 수 없는 전략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발전 전략 또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앞으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핵심적인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제주지역에서 2003. 2. 12)

□ 지방화를 위한 3대 전략

제가 선거 때부터 앞으로 우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전략으로서 동북아 시대라는 기치를 내걸고 아울러서 지방화 시대라고 함께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이 수도권과 함께 활력 있는 삶의 터전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전략으로서 행정권한에 있어서, 행정조직의 운용에 있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자치분권의 행사에 있어서 확실한 분권을 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는 전략 가설이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산업과 지방문화를 아울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지방이전까지 함께 내걸었습니다.

이 3개의 전략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듣고 가서 그대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전북지역에서 2003. 2. 11)

□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

지방을 어떻게 활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

방이 잘 살게 할 것인가 고심고심했는데, 대개 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획기적으로 분권을 하려고 합니다. 재정에 관한 분권도, 재정의 지방이양도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같은 돈이라도 꼭 용도를 정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이전 비율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권한과 재정에 관해서는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회하고도 타협을 해야 합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대구·경북지역에서 2003. 1. 27)

□ 행정수도 공약은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전략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용 공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청사까지 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 된 것은 결국 민심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이 이대로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더 버틸 수가 없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이 이대로 더 가면 또 다른 지역주의의 대결이 또 생깁니다. 엄청난 문제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고는 수도권도 이상 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옮길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꾸준히 설득하면, 반드시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설득하고 옮길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걸리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10년이라도 도로 내는데 걸리는 10년짜리가 아니라 국가의 역사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수도의 일부, 기능의 일부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 합의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옮겨야 됩니다. 그

건 반드시 하겠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에서 2003. 1. 18)

□ 지방발전의 핵심은 산학연 연계

대체로 분권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행정권한이나 일부 입법권 재정권을 지방에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이 멈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금융까지도 권력이 결정했기 때문에 권력 따라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실제로 시장의 흡인력이 훨씬 더 크고 이미 수도권의 막강한 시장흡인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시켜도 지방 분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서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늘 여러분들께 기본개념을 제안 드리고 앞으로 검증을 한 번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감이 가시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제안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산업 육성, 지방문화 창달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게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집중적 육성을 통한 지방산업과 지방문화의 육성,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정부 예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R&D 투자가 전체로 연간 5조원이 훨씬 넘어섭니다. 대학교에는 약 1조 1000억 원 정도가 가고 있고 나머지는 연구소와 기업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시켜 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방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을 한 번 재배분하는 방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광주·전남지역에서 2003. 1. 28)

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 수도권 과밀, 지방 소외는 반드시 해결해야

이제 모든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은 너무 과밀하고 집중돼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방은 소외돼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안고는 국민화합이나 2만 불 시대가 불가능합니다. 참여정부는 지방을 발전시켜서 해결할 것입니다. 지방이 독자적 경쟁력 갖추고 국가발전의 역동적 주체되게 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2003. 12. 5)

지금 가장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찾는다면, 지금 당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모든 조건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을 가지고 본다면, 수도권 집중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방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계속 과밀이 축적되면 경쟁력도 떨어지고 사람 살기도 불편해집니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서울을 위해서도 지방을 발전시켜 산업도 일으키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흠어져 살아야 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을 참여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주로 물량 위주의 투자 확대만을 계속 해왔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질적 발전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경제발전 전략도 혁신주도형 경제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하고, 국토의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야 하고, 아울러 경제 기업뿐 아니라 정부 행정, 공공부문 모두를 혁신해야 합니다.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오찬간담회에서 2006. 11. 29)

□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여야 수도권도 발전할 수 있어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꼭 느끼지만 말을 하면서도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 원체 큰 틀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정말 해 봅시다. 끝장을 냅시다. 분권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러 행정조직 감안하면 그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수도권에 산업의 흡인력이 집중돼 있어 엄두를 낼 수 없다. 또 교육의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비교하며 무슨 경쟁력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떼어놓고 보면 이루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부가가치 산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이미 큰 압력이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 잡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행정, 교육, 산업적 측면에서 지방분산, 지방을 키워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며 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각 분야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과제 TF 워크숍에서 2003. 4. 16)

□ 지방의 위축은 전략의 부재가 문제

지금은 나라가 잘사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이 함께 잘사는 방법을 찾고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놓고 이익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잘살 수 있게 국가의 힘을 모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방을 잘살게 하겠다는 목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공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이 위축되고 서울만 계속 팽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방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방이 잘사는 정책을 쓰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을 안 해야죠. 안 되는 일을 30년 동안 약속하고 공수표를 계속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천되느냐, 저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전략이 잘못된 것입니다.

(경북북부 현장방문 오찬 간담회에서 2004. 12. 15)

□ 43년간 망가진 국토 복원해 경쟁력 키워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이 차이는 지난 40년간 진행돼 온 것입니다. 맨 처음 대도시 집중억제 정책이 1964년에 나왔습니다. 1964년에 이미 억제정책이 나왔고 1972년 국토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성장억제 지역, 성장관리 지역이 나와서 억제했는데도 대도시화가 오늘까지 진행됐습니다.

1964년부터 43년 동안 망가뜨린 것을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 것입니다. 1964년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적어도 전국토가 사람이 살 만하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하고,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국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오찬에서 2007. 2. 7)

3.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 균형발전도 사회투자

사회투자에 대해 복지병이라 얘기하면서 복지비용 줄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흔히 말하길 신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보수적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보적 노선에 사람들은 복지비용이라 하지 않고 사회투자라 이름 붙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회투자 부분은 정치 노선에 따라 입장을 약간씩 달리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 부분이 사회투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약한 사람, 낙오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거나 역량을 확충해 주는 작업을 통해 낙오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사회투자의 개념이라 하면, 균형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오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킵니다. 소위 균형이란 아무래도 진보적 개념입니다. 제가 분배주의니 좌파니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2007. 3. 22)

□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 만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

우리나라 학자가 연구결과를 내놓아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위가 입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 위로 올라간 것이 비용이고 아래로 내려간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은 결국 우리도 살기 좋은 국가,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꼭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대국민 보고회 오찬에서 2007. 2. 7)

□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 갖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

균형발전정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말은 무성했지만 그러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도시 몇 개를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토를 재편성하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과 의료, 문화,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고루 갖춘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도시를 전국 곳곳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마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도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농민들과 함께 농촌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국토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숨통이 툴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난과 교통난, 환경오염과 같은 과밀의 폐해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인 개발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좀더 여유 있고 넉넉하고 쾌적한 수도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쾌적한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2006. 1. 12)

□ 균형발전정책은 한국 미래의 성공에 핵심 요소

균형발전에 관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중이 좋든가 분산이 좋든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분산이 좋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진외국들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헌법적 명령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한국 미래의 성공에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와 문화의 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 균형인사입니다. 이를 기존의 구조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심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균형인사에 관해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에서 2007. 7. 25)

□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철학과 가치…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

참여정부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발전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균형발전을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삼아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은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로드맵’을 통해 중앙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지방에 내려 보낸 권한과 사무가 이전 모든 정부에서 이전한 것이 세배가 넘는 880건에 이릅니다.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24%로 높이는 등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4년 동안에 30조 원 가까이 늘렸습니다. 각종 조세와 규제에 있어서도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과 특례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어서, 제주와 경북 혁신도시, 태안 기업도시가 착공했고, 오늘 경남에서 진주 혁신도시가 첫 삽을 뜹니다. 전국 곳곳에 지역발전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저절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10. 31)

4.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것

□ 균형발전은 조금만 멀리 보면 모두를 위한 것

균형발전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국가가 균형발전을 하는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놓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놓고 보면 다소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을, OECD 국가들을 선진국이라고 하고, 좀 더

좁히면 G7국가 또는 G10 국가를 말합니다. G10 하면 한국도 턱걸이를 하는데, 대개 그런 국가들을 보면 균형발전에 있어서 잘 분산되어 있고 균형 있게 발전해 있습니다.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경우엔 그런 점에 있어서 결국은 수도권 일부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도권 자체 경쟁력에도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국정현안 시도지사 초청 토론회에서 2006. 8. 8)

□ 지방과 수도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행정수도 이전하면 통일 이후에는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정부가 통합되는 독일식 통일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 각자 구심점을 갖고 개성쯤에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방은 스스로 발전전략을 내지 못한 채 수도권 억제 얘기만 하고 수도권은 지방의 발전은 도외시한 채 억제에 대한 불평만 얘기하며 곳곳에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나름대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상생하는 관계로 가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다음 총선에서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버리면 정부의 정치적 독점권이 해소돼 버립니다. 제 의지는 확고하다.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2003. 11. 6)

□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

앞으로는 제품이 많이 나오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전문가들,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라야 경쟁력 있는 도시죠. 서울 사람들도 조금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에 사는 서울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

략이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짧게 보면요, 아무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멀리 보아야 진정으로 가치가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보면 이익은 이익이고 가치는 가치입니다. 멀리 보면 바로 가치 있는 일이 이익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토론회에서 2007. 5. 30)

□ 우리 국민은 갈등을 극복할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공공기관을 강제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할 때도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동의를 만들어 내고 하는 일들을 참모들이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공공기관을 어떤 지방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만 해도 갈등 요소가 적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해 그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광역단체 안에서 어디에다 혁신도시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수 없는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극복했습니다.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빨리 이런 문제가 마무리되고 갈등이 극복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안에 일을 다 해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걸 보면서 정말 특별한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의 과정에서 이런 난관을 극복한 역량을 보면 남은 문제도 다 극복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 기관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내다보고 차근차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실행전략보고회에서 2006. 10. 17)

5. 균형발전 방향

□ 행정수도 이전은 전 국민을 위한것

행정수도는 충청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해서도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1977년도에 대전에 판사로 발령 받아 근무할 때 그때도 대전으로 수도가 온다고 해서 한번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이후에 안 되어서 계약해제 소송이 넘쳐나고, 내가 그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이 잘 안 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하고 숨이 막히는데 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충청도민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충청도를 위해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때 충청도로 신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충북 인사들 오찬간담회에서 2003. 10. 27)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 재정비 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 잡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도권도 금융 비즈니스 그리고 첨단산업의 동북아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방화 전략도 역시 저항에 부딪쳐서 무산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행정수도 계획,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 핵심과제이고,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참여정부의 아주 중대한 정책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각오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되살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2004. 6. 15)

한국에서 공론으로 제기된 것은 20~30년이 넘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국가적 과제입니다. 단지 수도권이 계속 확대되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감히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 등 규제조치로 발전의 한계가 되고, 한편으로는 억제 정책이 한계에 부딪혀 무력화되고 난개발로 수도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도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난 2002년 지자체 선거 때 어느 당도 수도권 문제에 대해 대책을 못 내놓을 때 그때 전체 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구상한 게 행정수도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결코 충청권에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수도권도 동북아 경제허브, 금융허브가 되자면 지금의 법체계로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잡아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win-win)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충청권의원 만찬에서 2004. 11. 5)

국가균형발전의 새 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영상물을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칩니다. 개방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정부청사,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금강변과 전월산,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어 주신 ‘세종’이라는 이름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대선공약에 대한 치열한 공방과 2004년 1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그리고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이르기까지 힘든 산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틀림없이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완벽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주

민이 대화하고 협력해서 1년여 만에 토지 보상도 마무리했습니다. 정책 집행의 모범사례라고 할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 여러분께서는 생활터전을 옮기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행복도시의 첫 주민이 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생활대책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2007. 7. 20)

□ 기술혁신, 지역혁신으로 가야

우리 정부는 국가발전전략으로도 과학기술혁신, 인재육성 그것을 첫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도 혁신과 인재 그것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수단 중의 하나로서는 산·학·연 협력관계를 비롯해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또 지역혁신체계,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함께 권고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과학기술혁신, 시장개혁, 사회개혁 이런 것도 크게 발전전략이지만 크게 보아서 균형과 혁신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 토론회에서 2004. 9. 6)

지방대학을 가지고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보자는 여러 가지 시도는 있지만, 그 지방대학을 뒷받침해 줄 지식기반이나 산업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제로라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목표입니다. 공공기관만 개별적으로 달랑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그 지역의 지식 중심인 대학교, 그리고 지금 있는 기업과 앞으로 유인해야 할 기업들이 지방의 활력을 살리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의 혁신도시 구상까지 왔습니다.

(혁신도시건설 실행전략보고회에서 2006. 10. 17)

저는 지방의 경제단체들이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혁신도시 혁신 클러스트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의 교류입니다. 한 자리에서 만나 기업인들이 상호 끊임없는 정보를 교류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지역마다 어떤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일일이 공기업을 만들어 뒷받침해 주면 좋겠지만 실제 정부가 그만큼 역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뒷받침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중앙정부의 몇 마디 지시가 아니라 지역의 기업, 학교, CEO들이 좀 나서서 지역의 분위기를 좀 바꿔 주셔야 합니다.

(글로벌 기술인력 혁신보고회에서 2006. 11. 6)

전국에 펼쳐질 10개의 혁신도시는 지방의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관련 기업이 따라오게 되고, 이들이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내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어서 혁신을 이루고 이러한 혁신이 주변으로 파급되는 혁신의 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과 교통, 교육, 의료, 문화가 잘 갖춰져 있어 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도시들을 기반으로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을 특성 있게 가꾸어 나가면, 전 국토가 활력 있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재편성될 것입니다. 현재 64개 시범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10. 31)

□ 생활의 수준을 바꿀 것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지만, 지금은 균형발전정책이 중앙과 지방으로만 나뉘어

있을 뿐이지 지방에 있어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조그만 소도시 같은 개념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전체를 포괄해서 균형이 잡힐 때라야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있는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사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부분들과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관심을 모아 나가서 정책의 우선순위도 높여 나간다면 상당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의 중간 결실의 하나로 준비된 이 전시회를 관심 가지고 깊이 보고 돌아가셔서, 더 크게 한 번 우리 국토환경 전체를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공간 전체를 바꾸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보다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원마을페스티벌 개막식에서 2006. 10. 12)

참여정부의 핵심 전략이 균형발전전략인데요, 논리적으로 반드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선진국은 주거공간, 생활공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한 일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수도권 중심의-2,300만 정도가 모여 있는데- 수도권 중심의 도시 국가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일지, 경쟁에 있어서 효율적일지, 국민의 행복에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일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점에서도 저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경제점검회의에서 2007. 1. 4)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한국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행정수도가 반쪽이 되어 버린 것이 유감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공치사하는 모습이 씁쓸합

니다.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각 지방의 혁신 클러스터는 우리 국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새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생활공간의 수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우리 농촌에 자연마을이 있으면 결국 아이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우리 손주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물론 도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문화가 품위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겠지만, 저는 우리 농촌을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복원해야 하고, 문화적으로도 복원해서 녹지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지만, 나가는 게 시큰둥해지면 또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한국은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소득수준에 비해 한국이 더 개발돼야 하는 곳이 어딘가, 더 다듬어야 되는 데가 어디냐 도시든 집이든 길이든 어떤 구조물이든 보다 더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농촌도 완전히 새롭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 복원시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 업무보고(농·어업인)에서 2007. 3. 20)

어떻든 10개의 혁신도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축, 교통시설, 교육, 의료, 문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첨단기술을 다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경제적 활력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잘 조화를 이루는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꾸며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 도시의 활력을 동력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농촌지역까지 함께 연계가 돼서 지방이 농촌과 지방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전 국토가 함께 활력 있고 함께 살기 좋은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 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점차 발전해서 작년에 정리를 한 것이 살기 좋은 지역 만 들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는 도시를 꾸미는 사업만이 아니라 지금 점점 쇠퇴해가는 농촌지역까지 다시 재개발을 해서 그렇게 사람이 살 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짜서 지금 함께 국가적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9. 20)

□ 지방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30년 동안 진행된 중앙,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적인 부담이 됩니다.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국가경쟁력을 떨어뜨 리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과제의 목표로 삼고 대 단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이 잘 살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과 자원이 총동원되어야겠지만 그중의 핵심은 지방의 발전역량과 스스로의 역량 입니다. 그 역량의 핵심은 지방대학입니다. 시민사회와 경제, 지방대학 3박 자가 결합해야 합니다. 그 매개체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야 합니다.

(대구·경북 언론인과의 만남에서 2003. 8. 19)

결국 지역은 스스로의 발전전략을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고 중앙정 부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자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 래서 지방에는 스스로의 발전전략, 의지를 갖춘 지방인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를 쳐다보고 의존해선 성공 못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도 그렇습니 다. 지역발전 전략 지원하되 가장 혁신의지 강하고 성공 가능성 높은 지역에 자원을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의 정책입니다. 지방에는 지방적 사고를 가진 지방의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인천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서 2004. 7. 8)

이러한 지방화와 혁신의 분위기를 더욱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민선 제4기를 이끌어갈 단체장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행정역량이 민간기업을 앞서나갈 수 있도록 혁신의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도시가 아니라 질 높은 삶의 조건을 고루 갖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중앙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선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취임을 축하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2006. 7. 1)

지역은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낙후 정도와 가능성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공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으며, 되는 사업도 있고 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지역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기업 유치에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지역기업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책사업은 입안으로부터 통상 10년, 때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문화중심도시도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시의 삶을 바꾸려면 10년 20년 이상 걸립니다.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봐야 하며, 우리의 의식을 통째로 바꾸어야 합니다. 50년 뒤 광주·전남의 경쟁력은 지역 주민들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광주·전남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2007. 5. 18)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중앙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역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서로 협력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때 혁신역량도 커지고 더 큰 발전의 기회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고, 2단계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질수도 대단히 많고 복잡합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생각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별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도권 집중의 흡입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기회를 잘 살려 나갑시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9. 12)

6. 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될 것

□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1단계의 뼈대에 살 붙이는 것

일부 지표가 좋아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5년 만에 확연히 좋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균형발전 실패’, 벌써 이런 제목을 뽑아 버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도권 집중이라는 것이 약 40년 내지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전 임시행정수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1975년이었습니다. 1975년, 6년 그때 나왔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32년이 됩니다. 그렇게 해온 것을 복구하는 것만 해도 더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균형발전, 결과를 가지고 성공-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정책으로는 너무 느리거나 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 2단계 정책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최대한 연내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 1. 30)

이제 중앙으로 집중되는 속도는 좀 줄여 놓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002년에 21만 명에서 2006년 11만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넘게 심화되어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단시간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참여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경감 등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 교육, 복지1 . 의료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지방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정책입니다.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에서 2007. 7. 20)

□ 2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야

2단계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오래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 역시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1단계도 쉽지 않았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압력도 대단히 강합니다. 5년 내내 수도권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압력에 참여정부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규제를 마구 풀어 버리면 수도권이 혼란해집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여러분들이 볼 때 새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롭지 않아도, 이번에 정리되고 발표된 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남은 정권이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 정부에 던져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정리해서 굳이 제출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균형발전정책 갖고는 사태를 역전시키기는 역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이 정책을 완전히 굳혀 놓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 오찬에서 2007. 2. 7)

아직도 균형발전정책이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열심히 해 왔지만, 4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중앙 집중이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서 보듯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기업과 사람의 행렬을 지방으로 확실히 돌려 보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서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화해서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균형발전이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조차 서로 의견이 나뉘어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등급 지역은 1등급 지역이 아니라는 불만이고 3등급 지역은 2등급 지역이 아니어서 불만인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데도 당장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아니면 내 밥그릇이 이웃집 밥그릇보다 좀 작다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거나 또는 무관심해서 이 정책은 국회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정책의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지역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균형발전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2007. 10. 31)

□ 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지막 날까지 최선 다할 것

앞으로 2012년까지 기반시설에만 약 56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투자까지 합하면 101조원을 넘습니다. 건설경기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인건비나 자재 파동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책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량뿐만이 아닙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은 건축, 환경,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이 모여져 도시 건설의 모범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우리 건설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명물이 될 것입니다.

(건설 60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2007. 6.20)

저는 토목 대통령은 아닙니다. 결국 균형발전이라는 계획 속에 저는 제2물결 대통령이 아니고 제3의 물결 대통령이거든요. 제3의 물결의 세대인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결국 토목공사는 다음 정부에 가서 꽤 풍성하게 벌려 놓았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혹시 다음 정부 때 지방에 공사가 되고 하거든 참여정부 덕분이라고 그렇게 한번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사 부탁안 했는데 오늘 하나 부탁드립니다.(웃음) ‘아 이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거’라고 그렇게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미리 ‘다음 정부에 가면 지방에 공사 딱 나온다.’ 이렇게 좀 써 주십시오.

지방 SOC 예산을 빨리 줄이려는 것을 국토 재편성을 위해 SOC 예산을 줄이지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열심히 해서 지방경제가 살아나도록 마지막 날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언론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2007. 1. 30)

□ 혁신도시, 힘겹지만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보니까 정책 하나가 가시화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 분석을 해 보니, 어떤 정책에 관한 구상이 나와서 그 구상을 채택한 다음부터 그것을 실제 타당성 조

사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리적 검증까지 거치고 여러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책을 다듬어 내는 데까지 보통 7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후 부처 간의 협의와 국무회의 통과, 다시 국회를 거치기까지의 시간은 약 2년 여가 걸립니다.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하나가 2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비교해 보면 균형발전, 특히 혁신도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좀 있고 해서 힘들게 온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다 통과됐습니다만 마지막 될 때까지 역시 저항은 많이 있습니다. 해 놓고 나서 사업진행에 관해 어떻게든 뒤집어보려는 사회적 영향력 힘들어 작용하고 있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감개무량하다고 할 만큼 특별하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온 것 같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제주 주요인사 오찬간담회에서 2007. 9. 12)